

보도시점 : 2025. 2. 4.(화) 06:00 이후(2. 4.(화) 석간) / 배포 : 2025. 2. 3.(월)

‘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키포프 회의’ 4일 개최

-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,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·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‘항공안전 혁신 위원회*(이하 위원회)’ 첫 기획 회의(키포프 회의)를 개최할 예정이다.

*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·자문 기구(비법정)

- 위원회는 12.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, 1.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,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.
-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,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.

-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,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*이 ‘항공운항 안전 분과’와 ‘공항시설 개선 분과’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.

* (항공운항 안전 분과) 항공안전(4), 조종(2), 정비·객실(2), 소비자·법률(2) 총 10명
(공항시설 개선 분과) 항공교통(2), 조류(2), 건설·토목(4), 항행·법률(2) 총 10명

** 국토교통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료제공 등 지원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.

-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(LCC)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, 공항 건설·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.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비롯하여,

-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,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, 공항 건설·운영규정 개정,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**항공 안전체계 쇄신**을 위한 **다양한 방안**을 논의한다.
- 아울러,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**민간 전문가**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 **항공** 분야의 **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**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.
- 향후, 위원회는 항공·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·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‘25년 3월 말까지 **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**을 마련하고,
- ‘25년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**항공안전 혁신 대책**을 최종적으로 **확정**할 계획이다.
- 이번 첫 기획 회의를 주재한 **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**은 “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**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**은 현재 정부가 **최우선적으로** 다루어야 할 과제”라고 말하며,
- “우리나라 **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**을 위해 정부는 **항공안전 체계를**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**뼈를 깎는 노력**을 기울이겠다”고 하는 한편, **향후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**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.

담당부서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윤근 (044-201-4204)
		담당자	서기관 서기관 주무관	신익승 (044-201-4181) 이양구 (044-201-4189) 최규열 (044-201-4182)